



2018 전국 청년회장 합동연수

국민민복 정신 바탕으로 가치관 정립 운동 앞장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장기식 회장 등 내빈들이 7월 7일 합동연수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 시·도 및 시·군·구 지구총재난구조단장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인 국민민복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 정립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자총은 7월 7~8일 세종시 조치원읍 흥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이준희 세종시장 및 서

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김평환 사무총장, 장기식 전국청년협의회 회장과 시·군·구 청년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 청년회장 합동연수'를 갖고 또 다른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첫째 날인 7일에는 개회식에서 이어 총재 특강(주제:국민민복을 향한 청년회의 역할), 심폐소

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김평환 사무총장의 청년회 발전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 만찬 및 화합의 시간이 있었다. 박종환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자총이 추구하는 국민민복 정신의 실천은 청년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 동참과 주도적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오늘 이 자리가 시대가

박종환 총재 지방조직 순방

세종-강원-부산지부 취임 후 첫 방문

박종환 총재가 초도방문을 겸한 시·도지부 순방행사를 차례로 갖고 있다. 박 총재는 7월 7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자유회관에서 서순철 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직원과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지부 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부 현안 및 업무 보고, 간담회 등이 있었다.

이날 박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가치관 정립이라는 자총의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지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노고를 치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기쁨이 마련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민민복의 자세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총재는 이에 앞서 6월 25일에도 부산시 초읍동 자유회관에서 초도순시를 겸해 열린 '자유수호결의 다짐대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양재생 회장과 지부 임·직원 및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6월 27일 춘천시 삼천동 자유회관에서 유래형 부총재, 주복용 회장 및 18개 시·군지회 회장과 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지부 초도 방문 행사를 했다.

요구하는 국민민복 정신을 청년운동의 새로운 아젠다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윤용선 한양대 교수의 특강(주제:재난환경변화 및 대응방안), 지역별 활동현황 점검 및 수범사례 교환, 우수회원 포상 등이 있었다.

성명서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에 현저히 위배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 행정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21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 우리는 지난 5월 2일 발표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되며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행정 예고가 이어진 것에 대해 크나큰 유감을 포함합니다.
-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명기가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각종 사이버 '민주주의' 체

제와 차별성을 확고히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음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통일교육지

원법 제2조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교육현장을 크게 어지럽힐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엄숙히 촉구합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헌법 전문에 비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빼더라도 자유라는 단어는 꼭 넣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고 목표이자 최종적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다다른 최고의 정의이자 우리 헌법의 교유정신이기도 한 자유라

는 단어를 빼려는 일부 인사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자유를 싫어하느냐고 외쳐 묻는 바입니다.

■ 우리 자유총연맹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이 우리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청소년 교육 방향에도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행정예고 철회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전국의 350만 회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불멸의 사명감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시행에 앞장설 것을 감연히 선언합니다.

2018년 6월 22일

